

〈主 題〉

# 지역정보화 현황과 발전방향

한 영 남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화본부장)

□ 차 례 □

I. 지역정보화의 필요성 및 의의

II. 지역정보화 현황

III.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IV. 지역정보화의 발전방향

## I. 지역정보화의 필요성 및 의의

지역정보화는 국가 중심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지역을 정보화를 통해서 발전속도를 가속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 개념은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단기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중심거점방식의 국가개발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날로 벌어져 왔다. 이로인한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산업 활성화 그리고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정보화를 채택·시행하여 왔는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유사하다고 하겠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산업화의 완성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영토나 정치·사회 등의 제반 여건면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인식의 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최근 유럽이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유럽내에서 국가간·지역간 차별과 함께 동유럽과 서유럽간의 격차 등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전유럽 차원에서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란 일정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기본틀을 다지는 것과 지역 나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정보화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는 목적으로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정보화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과 효과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정보화의 이점은 구체적인 재화나 물질적 가치의 생산보다는 의사소통의 효율화에 있다. 의사소통의 경로가 단축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명료하게 생산되고 동시에 쉽게 이용 가능해짐으로써 제반 산업활동이 전보다 적은 자원의 투입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에는 데이터의 통합관리와 원격이용이 뒤따르며 이로 인해 분산된 데이터의 이용을 위한 공간적 이동과 시간의 소요가 단축하게 된다. 의사소통의 효율화에 이어 또다른 정보화의 이점은 목적달성의 자동화에 있다. 의사소통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의사결정과 조치의 여러 기능들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내 모든 동사무소에서든 가능해진 주민등록 발급업무나 은행에 찾아다닐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홈뱅킹이나 폰뱅킹, 원격지에서 재배의 상태를 파악하고 급배수, 환기 등을 통제하는 원격영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역정보화는 이러한 정보화의 편익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도 많은 물질적, 문화적, 기술적 자원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에 편중되어 있는

이 자원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해당지역 인근주민에게로 한정되어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자원들을 전국민이 공유하여 기본적인 면에서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화가 지역주민의 삶과 경제수준을 자동적으로 상승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화로 인하여 중앙과 지역간에 있어 기존의 각종 격차 외에 정보격차가 추가될 가능성마저 있다. 제반 여건이 양호하고 시장창출이 용이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선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고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은 여전히 정보화의 낙후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상존하며 오히려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와 관련된 업체와 인력 그리고 정보화마인드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지역은 불리하다. 이와같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 전체의 의지가 결집되어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Ⅰ. 지역정보화 현황

정부 각 부처에서는 통신망의 확충, 지역산업육성 지원, 과학기술 이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지방차원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앙부처는 과거와 같이 지역정보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임하거나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역행정의 대표기구인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지역 자체의 열의와 의사를 수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체신청, 한국통신, 한국정보문화센터 등 산하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 선도조직 육성,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지역의 정보통신기반 확립,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등의 다양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센터는 정보사회로의 호

표 1. 정부 부처별 주요 지역정보화 추진사업

주관 부처	추진사업	주관기관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li> <li>· 농어촌컴퓨터교실</li> <li>· 지역정보센터 지원사업</li> <li>· 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시범사업</li> <li>· 지역정보통신센터 구축 및 운영</li> <li>· 우체국 단위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li> </ul>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정보문화센터, 지방체신청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통신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 지역정보화모델구축</li> </ul>	산업기술정보원
과학기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술정보망 구축사업</li> <li>· 지역협력연구센터</li> </ul>	연구개발정보센터 과학재단
내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화</li> </ul>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과적인 진입을 위한 여론형성 및 여건조성, 대국민 홍보 및 계몽활동, 정책과제의 연구·건의 등을 위하여 1988년 5월 처음으로 정보화문화협회의회를 결성하였으며, 1991년 6월 지역정보화의 추진방향 정립 및 사업전개를 위하여 전국 8개 체신청 단위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및 8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1996년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해체하고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주요사업은 각종 세미나, 연구조사사업, 홍보지 발간 및 전시사업, 공모행사 등을 개최하여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왔다.

1996년에는 정보통신 시연 및 강연회 4회(인터넷과 정보사회 강연 및 토론, 인터넷과 정보엑스포, 21세기 강원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화전략, 미래정보화 사회와 우리의 자세 등), 정보통신 전시회 6회, 심포지움 1회(부산, 경남지역 정보화추진을 위한 심포지움) 및 세미나 4회, 도서지역 중고PC 보내기, 홍보책자 발간 8회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1997년부터는 기존의 강연회 위주의 획일적인 행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멀티미디어 화상시연, 패넬토의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구성과 더불어 특정계층(여성정보화, 대학동아리 지원, 주부 PC경진대회,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설정으로 행사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무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구분, 사업성격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특히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구성·운영중인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석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위원들을 지역정보화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교체·영입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연계하여 내무부의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와의 역할분담 및 유사기능의 통합조정 등 지역정보화의 핵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총체적인 힘을 결속해 나가도록 협조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2) 농어촌컴퓨터교실

농어촌컴퓨터교실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컴퓨터 및 정보통신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아울러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1988년 4월 전남 고흥군 녹동 우체국에 처음 개설된 이래 1996년 5월 현재 58개 지역에서 운영을 완료하고 53개 지역에서 운영중에 있는 국가차원의 무료 정보통신 교육사업이다.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각 지역 우체국(일부 공공건물 활용)에서 2년동안 설치·운영되며 PC 11대, 프린터 7대 및 시청각장비 등을 갖추고, 강사요원 1-2명을 배치하여 1999년까지 136개 지역에서 운영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대상은 농어민, 직장인, 주부, 학생 등을 망라한 지역주민이며, 교실형편에 따라 1일 3개반(오전, 오후, 저녁반) 또는 2개반이 운영된다. 1개반은 4주단위로 1일 2시간씩 총34시간의 수업을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MS-DOS, WINDOWS, 워드프로세서, PC통신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유용성이 높은 과목들이다. 이외에도 교육대상자에 따라 특정과목을 집중 강의하는 특별반 운영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강사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교육으로 지질향상을 도모하고 강사로 하여금 교육이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HW, SW 기술지원, 출장교육, 정보화 관련 VTR테입 대여 등 정보화 지원업무를 병행하는 등 지역단위 정보화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특특히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체신청과 우체국의 협조로 교육장 설치와 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아 운영한 사업으로 지역별로 2년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교육 희망자 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으로 사업효율을 제고할 예

표 2. 농어촌컴퓨터교실 지역별 설치·운영 현황

구분	경 기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충 남	충 북	강 원	제 주	계
운영완료 (’88~’95)	김포 가평 여주 안성	산청 양산 거창 동해 고성 통영	울진 안동 봉화 고령 김천 주성 의성 청송	녹동 함평 장흥 구례 곡성 해남 강진 순화	진안 무주 순창 남원 부안 창성 고령 임정	서천 성대 천령 보령 진천 조치원 아산 당진	괴산 영동 충주 옥천 보은 제천	양구 영월 평창 인제 원주 철원 화천 삼척	한림 서귀포 제주	58
운영중 (’96~)	오산 포천 광주 남양주 안양 연천 의정부	합천 남해 사천 밀양 거제 함양	영덕 영천 예천 위천 구미 영양 영주	장성 여천 담양 고흥 도산 완도 진도 광양	완주 장수 대진 대진 김제 익산 신대인	청양 금산 공주 태안 부여 예산 산청 서산	음성 진천 단양 공주	홍천 정선 횡성 태백 춘천 동해 속초	구좌 모슬포	53
’97설치 예정지역 (’97-’99)	이천 용인 파주 구리 고양	의령 함안 창녕 김해 진주	달성 문경 영주 영천	보성 영광 광안 신안 순천		천안	청원	고성 양양 원주 강릉		25
계	16	17	19	20	14	16	11	18	5	136

정이다. 또한, 컴퓨터 사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99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생활권 중심의 상설 교육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 지역정보센터 지원사업

정보통신부는 지역정보화를 선도해나가는 정부부처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1993년에 체신청 단위로 8개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인, 부산, 충청, 해남, 대구, 진안, 강릉,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산원, 통신개발연구원, 한국PC통신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시범사업 지원반을 구성·운영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별 주제중심의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대비한 DB구축이라는 점에서 최초 사업이며 향후 전개발 사업모델 케이스 발굴 및 타당성 확보에 그 의의가 있다.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실용사업으로 전환 추진키 위하여 1994년에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지역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초단위지역에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공중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정보센터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사업은 정보화 의지가 강한 지역을 선정,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정보화의 전진기지로 육성·발전시킨다는 계획하에 추진되어 1997년 5월 현재 전국 37개지역에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의 자치단체, 언론기관, 교수, 일반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고 한국정보문화센터는 DB개발비의 장비비 및 공중망서비스 관련 통신비용을 1년단위로 3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DB개발은 지역소재 대학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지역의 실용SW개발역량을 제고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역할을 담당케하여 명실상

표 3. 지역정보센터 설립 현황

구분	지역	센터명	서비스명	서비스개시일
경기도	의정부/양주	의양지역정보센터	의양텔	'95. 6. 1
	강화	강화지역정보센터	MARITEL	'95. 5. 8
	안산	안산지역정보센터	서부텔	'96. 9. 10
경상남도	거창	거창지역정보센터	KCTEL	'95. 5. 8
	밀양	밀양지역정보센터	MIRYTEL	'95. 4. 1
	산청	산청지역정보센터	천왕봉네트	'95. 6. 1
	양산	양산지역정보센터	양산텔	'96. 6. 21
충청도	태안	태안지역정보센터	TAEANTEL	'95. 5. 8
	청양	청양지역정보센터	칠갑텔	'95. 6. 1
	청주	청주지역정보센터	CHAINS	'95. 2. 16
	보은/영동/옥천	금강지역정보센터	금강텔	'96. 9. 10
	공주	공주지역정보센터	WINS	'96. 10. 11
	논산	논산지역정보센터	NAIS	'96. 7. 26
	충주	충주지역정보센터		'97. 7
	예산	예산지역정보센터		'97. 7
전라남도	해남	해남지역정보센터	HINTS	'94. 8. 16
	순천/광양	순천지역정보센터	전남동부텔	'95. 5. 8
	목포	목포지역정보센터	MAINS	'95. 5. 8
	장성	장성지역정보센터	방울샘	'96. 7. 26
	함평	함평지역정보센터	HIT	'96. 6. 21
	나주	나주지역정보센터	NINS	'96. 6. 21
	장흥	장흥지역정보센터		'97. 7
	여수/여천	여수여천지역정보센터		'97. 7
경상북도	구미	구미지역정보센터	KUMITEL	'95. 5. 8
	영덕	영덕지역정보센터	EASTEL	'95. 3. 16
	안동	안동지역정보센터	ADRIC	'96. 7. 26
	경주	경주지역정보센터	경주텔	'96. 6. 8
전라북도	진안	진안지역정보센터	MAITEL	'94. 9. 15
	익산	익산지역정보센터	만흔텔	'95. 6. 1
	군산	군산지역정보센터	KIS	'95. 4. 17
	김제	김제지역정보센터	KimjeNet	'96. 6. 21
	남원	남원지역정보센터		'97. 7
강원도	춘천	춘천지역정보센터	호반텔	'96. 10. 11
	강릉	강릉지역정보센터	삼청텔	'96. 3. 26
	설악	설악지역정보센터		'97. 7
	원주	원주지역정보센터		'97. 7
제주도	제주	제주지역정보센터	SAMDATEL	'94. 10. 1

부한 지역 스스로의 정보화 추진이라는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한 최초사업으로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생활, 행정, 농업, 관광, 교육문화, 전자계시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정보의 내·외부 발신으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외에도 각종 교육, 홍보,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자체의 DB개발 방법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으나 공중망서비스 시기까지의 과도한 시간소요와 함께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 일부 중복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노출되었다. 이를 보완키 위하여 1996년도 사업부터 「지역정보 표준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운영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운영자라면 누구나 지역실정에 맞게 변형하고 확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원체제 측면에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중심의 중앙지원체제에서 벗어나 점차 증가하는 지역정보센터의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체신청 중심으로 지원체제를 전환해 왔다. 중앙조정 및 기술분야는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담당하고, 관리 일반기능은 체신청에서 담당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역할수행으로 사업 효율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정보센터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향후 자립운영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예견되어 그 동안 자치단체와 일부 공동참여 형식으로 전개하여 오던 방식을 '97년 사업부터 자치단체 참여를 필수로 설정하여 인력·자금·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자립운영을 위한 토대구축을 사전확보토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 4) 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199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정보화의 필요성과 관심이 성숙되고 사업전개를 위한 분위기 및 여건이 한단계 높아졌다는 상황 인식하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통신 격차를 줄이고 지역정보화

의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제시하기 위하여 각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은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제주도 등의 자치단체가 제안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대전시청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기업 및 상품정보, 중소기업게시판, 구인·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며 충청도청의 「지역생산품 유통시스템」은 충북지역의 경제기반인 농업과 중소기업의 생산품 판매·유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자정보, 상품 DB, 사용자전자주문 시스템, 온라인 대금결제 등을 구축해 1차로 지역내 78개 농특산단지과 30여개 지역생산자를 도시 소비자와 직접 연결시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다.

제주도청의 「지역 복지망」 구축사업은 복지 수요자 취업정보, 자매결연 및 자원봉사자 정보, 긴급 연락, 보건·의료정보 등 복지 DB를 구축하고 이를 도 전체를 망라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제주도 전체를 「정보의 섬」으로 모델화하는데 한 축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국정보문화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제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 사업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5) 그외의 지역정보화 사업

이외에도 지역정보화사업으로서 우체국 단위지역정보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권에 보다 근접한 장소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케 하는 개방된 정보이용센터이다.

우체국이 제공할 정보서비스는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우편전산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원서류의 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 각종 고지서를 대송하는 서비스, 각종 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다. 체신금융망을 활용하여 홈뱅킹과 홈쇼핑 및 물류망과의 연계를 통하여

물류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또한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하이텔 단말기를 PC로 교체하여 지역주민에게 천리안, 하이텔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도서지역에는 이동 컴퓨터교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정보기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는 정보사회 도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나 교육시설, 강사 등 교육여건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범사회적인 여건 조성에 기여할 계획으로 '97년 5월에 서울, 부산, 대전 등 8개 체신청 단위로 모두 300여명의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1997년에 확립된 컨센서스중의 하나는 내무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사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문제가 급속하게 대두된 점을 감안하여 한국정보문화센터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97년 6월과 9월에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예요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통신은 도단위 권역별 주요 도시에 지역정보통신센터를 설립하여 지방화 시대 및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와 지역정보화 촉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정보통신센터는 크게 지역정보센터 기능,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역 거점 기능 등 세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94년 부산, 광주, 원주, 청주 등과 '95년에는 제주, '96년에는 전주, 일산 등지에 지역정보통신센터를 설립하여 이미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에는 분당에 설립할 예정이다.

나. 통상산업부

1) 지역정보화 모델구축 사업

통상산업부는 산업기술기반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제반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소재 기업체가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산업기술정보를 원활하게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이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기술정보 확산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전반의 정보유통 하부구조를 정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은 유관기관인 통상산업부, 공업기술원, 지방자치 단체 등과 협의하여 지역 기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정보센터의 활동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산업기술에 관한 종합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협의회는 지역정보망의 구축·운영에 따른 기관간 협력, 지역정보망 활용 및 홍보, 지역정보화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 및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정보센터가 제작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지역내 업체, 상품 정보, 시험기기 및 장비 보유 정보, 지역전문인력 정보, 중소기업지원제도 정보, 유통정보 등이다.

산업기술정보원은 현재 10개의 지역정보센터를 향후 단계적으로 중소도시까지 확대, 설치하고 산업기술정보원 본부와 지역정보센터간에 정보유통망을 고속화하여 지방에서의 산업기술정보 이용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KINITI본원과 지역센터간 정보유통망 및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본원의 중앙데이터뱅크(KINITI-IR)와 전국 각 지역의 10개 지역정보센터를 상호연결하는 자체 온라인 정보유통망이 강화되어 산업기술정보의 지방유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1995년에는 정보유통망을 4800bps에서 56kbps로 고속화하고 1996년 9월에는 다시 30배 증속한 T1(1.544Mbps) 인터넷 전용회선으로 증속하였다.

초고속국가정보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 망구축 사업은 산업기술정보원 전산기계실 내에 광단국(FLC)장비를 설치하고, 전화국과 본원간의 광케이블 선로를 통하여 본원과 각 지역정보센터를 T1회선으로 연계함으로써 고속의 데이터통신시스템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구축 중인 지역산업정보DB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는 물론 전국 각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활용에 상당한 개선과 이용 활성화가 예견된다. 지역정보센터에는 지역자체 정보처리 및 유통기능을 확보하

기 위한 중형급컴퓨터(IBM RS 6000)와 인터넷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서버가 설치되었다.

1994년까지 지역정보센터는 통신제어장치가 핵심장비로써 지역고유의 DB개발이 불가능하였고 서울 산업기술정보원의 정보를 단순히 중계 및 제공하는 단순 기능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내 기업연구소, 대학 등과 효율적인 정보유통체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LAN 대 LAN 접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충북 지역정보센터를 시작으로 LAN을 구축하고 있다.

1996년 1월 대구, 광주,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제 1단계 지역정보화모델사업과 그의 산업기술정보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충북지역 대상의 사업을 1995년 7월에 완료하였고 1995년 10월부터 산업기술정보원의 정보통신망인 KINInet를 통해서 전국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1996년 말부터 경남, 전남,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 9월 경에 종료될 예정이다.

#### 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기술정보망 구축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KIST) 부속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 분야와 생산 분야의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기업간 정보교류를 촉진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협력기관과 공동추진체제를 구축하고, 각 기업 및 지역고유정보(상품, 시설, 인력정보 등)를 DB화하고 있다.

먼저 수백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마산, 창원을 대상으로 산업과학기술정보유통망(RINET)구축사업이라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분야별 지역정보 12만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996년에 완료하였다. 이 사업의 현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지역정보유통망사업단은 이러한 성과를 한단계 발전시켜 문자로만 제공되던 데이터베이스를 컬러 그래픽을 지원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웹 서버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RINET와 별도로 1995년 7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메아리」도 최근 이용자가 급증해

3천명을 넘어서 1996년말까지 1만 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 정보들을 지역 소재 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가입 기관의 확대와 공중정보통신망의 접속을 통한 정보 제공범위의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그 양상을 보면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 구축한 20여개 60만 건에 달하는 KRISTAL DB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전산망을 근간으로 망확장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창원/마산지역에 구축된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인터넷을 활용하여 해외 R&D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IALOG, ORBIT, CDP 등 상업 DB서비스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1996년 9월 창원/마산 지역의 산업과학기술정보유통망의 서비스 대상 지역이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마산/창원지역의 산업과학기술정보유통망 구축사업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개발사업 자금을 지원받아 1995년 6월 광주 하남공단을 대상으로 '공단중심의 지역정보서비스시스템'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1996년 3월에 광주지역기술정보망(KJ RINET)을 개통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업, 인력, 특허 및 규격정보 등 13종 1만5천건의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공단 내에 56Kbps급 4개 전용회선과 일반 전화회선 4회선을 설치하여 정보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유통망(KRISTAL), 산업기술정보원(KINITI)망, 천리안, 하이텔, 인터넷 등과도 연동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정보센터는 한국통신의 공공DB개발사업자금을 지원받아 대전·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보시스템을 개발,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과기처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울산, 경인 등지에도 거점을 형성하고 향후 전국적인 과학기술정보유통망 확대구축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연구개발정보센터가 분야별 지역정보센터의 종합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산업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과기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연구



센터(RRC)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재단은 지난해 강원대 석재복합신소재 연구센터 등 3개 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6년 2월에는 전국 10개 광역시 및 도에 10개의 지역협력센터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라. 내무부

지역정보화에 있어서 내무부는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확대되고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무부는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국가적인 수준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전산기 및 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 말 현재 전산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가 85개이며 주전산기가 도입되지 않은 시·군·구가 68개이다.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하고 이어 전산실을 설치하여 주전산기를 도입하는 순으로 추진, 가능한 올해 안에 모든 시·군·구에 전산조직 구성과 주전산기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전산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전산업무지원단」이 지원을 담당한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요통계 등 행정자료를 DB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민서비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AMIS)를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서 올해 6월까지 LAN와 DB구축이 양호한 총 75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험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그 이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의 상호교류와 공동활용을 위해서 시험운영한다.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도 고도화된다. MOHA-NET 전용회선을 디지털회선으로 고속화하여 초고속국가망으로 전환하고, 중앙, 시·도 및 시·군·구간의 통신장비 성능과 용량을 보강하여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내무부와 시·도간에 회선을 현재 56Kbps에서 2,048 Mbps(E1급)으로 증속이 이루어지며 시·도와 시·군·구간에는 9.6K에서 64Kbps로 증속됨과 동시에 국가망으로 전환된다. MOHA-NET 자체의 성능 향상 이외에 이용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시도 소방본부의 긴급구조시스템과의 접속이 이루어지며 올해 안에 부동산과 자동차시스템의 공중통신망(DNS) 접속구간이 MOHA-NET으로 전환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타 중앙부처에게도 MOHA-NET을 계속해서 개방하여 정보화의 가시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추진되고 있다.

Ⅲ.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그 동안 중앙부처별로 추진되어온 지역정보화의 통합·유기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했으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이 입안·시행되게 되었다. 특히 내무부는 동 법에 기초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수립하였다. 이 계획이 수립되게 된 배경에는 지역정보화가 명확한 추진전략과 개념없이 중앙부처별 단위계획에 의거하여 각 부처가 고유영역의 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해 나가는 경향과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주민의 정보수요를 고려치 않는 사업추진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래의 정책적 목표의 실현에 대한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지역의 실정과 필요에 정통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법적, 제도적 협력없이 진행되는 하향식의 지역정보화는 더 이상 목표의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추진력도 미약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 역시 내부업무 정보화에 치중하여 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 초고속정보화계획 등과 연계된 지역의 종합 정보화비전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필요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내무부와 정보통신부는 지역정보화가 국가정보화의 주요 부문임을 인식하여 정

보화촉진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앙부처는 국가적 차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등 지역정보화 여건정비에 주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 기술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가. 추진목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1996년부터 2000년을 제 1단계로서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설정하고 이 단계의 목표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해 추진체제가 정비되며 단위지역마다 종합정보센터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2005년까지는 2단계는 지역정보화가 확산계로써 고

도 정보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시책이 추진되며 이 시기에는 자치단체를 위주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는 완전히 정보화되며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통한 기본정보의 보편적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다.

2010년까지로 설정된 제 3단계의 기간 동안에는 지역정보화가 고도화되어 모든 사람이 항상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생산, 유통, 이용할 수 있는 고도 정보활용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지역사회 각 부문에 완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다. 주요 추진 시책

□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지원

지금까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의 전산화 및 정보화에 우선 치중하였고 대외적인 지역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였다.

표 4. '95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1995년도 지역정보화 모델구축사업, 산업기술정보원

특히 재원문제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도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기 수립된 지역정보화계획 역시 현안별 정보화사업들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수립되어 상위계획이나 유관계획과의 연관성 측면 등에서 개성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충실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가 내무부 및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중심이 되어 진행 중에 있다. 지침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비전 제시, 지역 정보화의 추진체계 정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지역정보화 담당요원 양성, 분야별 정보화촉진 등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개발이 완료되면 뒤이어 광역 시·도별로 1998년까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기초시·군에서는 2000년까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지침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정비

지금까지 지역정보화는 중앙정부의 유관사업 및 관심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러한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민·산·학계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심체로 하여 추진체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체신청 단위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강연, 연구,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전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정보화가 명시된 고유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는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 제도적인 애로사항이 상존하였다.

지역정보화촉진계획에서는 시·도 중심으로 시장이나 도시사를 의장으로 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분야별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촉진협의회는 지역내 기관장, 언론, 방송, 산업 등의 민간기관 및 업체 대표, 기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촉진협의회는 자치단체가 추진할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 수립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심의, 조정, 의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촉진실무협의회는 지역정보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협의회에 건의하는 기능을 한다. 기존의 행정전산망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전산본부를 지역정보화본부로 개편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종합정보센터 설립지원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의 주민과 기업 등의 정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 수요와 정보 공급을 균등히 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소재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의 서비스 기능을 종합 조정할 전담기구로써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 3섹터 방식의 정보센터를 설립하였는 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산업기술정보원이 설립한 지역정보센터의 경우 자치단체와의 명확한 역할분담이나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지역정보화가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지역정보센터 구성과 운영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와 함께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합작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어느정도 정보화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광역시·도에서 먼저 설립하여 지역정보센터의 조기정착과 건설한 운영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초단위지역에서는 정보화 인력, 기반 등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장비와 인력이 충실한 자치단체 내부의 전산실을 지역정보센터로 육성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98년까지 광역 시·도에서는 지역정보센터가 구축되어 각종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책임지는 실무기구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는 1998년까지 주전산기 보급 완료와 함께 LAN을 구축하여 기반을 조성한 다음 1999년부터 본격적인 지역정보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다.

#### □ 지역정보화추진 전담인력 및 인력조정 지원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각종 시책을 입안하고 사업 추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다. 그간 행정전산화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인력을 지역정보화를 위해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까지 지역정보화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이 부족한 편이어서 광역시·도에서 지역정보계가 설치된 곳이 6개 시도에 불과하며 9개 시도가 아직껏 설치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기초 시·군 단위에서는 행정전산화에 필수적인 인력조차 충분하지 않은 곳이 많아 지역정보화를 담당할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담조직 및 인력조달 방안을 검토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개편과 인력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는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해당 지역내의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수용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의 선도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정보화를 담당할 전담요원에게는 중앙에서 교육을 하여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 지역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정보화의 필요성, 추진체계, 방법,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전담요원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시도공무원교육원, 자체 교육장을 통해 정보기기 활용법 및 정보화 일반 교육의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다.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정보화 기기나 조류에 접하고 체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에 비추어 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기기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초교육을 위주로 하여 교육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 □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육성지원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정보화의 오지로 남아 있다. 기본적인 정보수요조차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중심의 수요유발 정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촌 지역도 정보화의 대열에 나오지 않고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단위 지역의 마을마다, 통합시의 경우는 읍면 지역의 마을마다 이용과 관리가 용이한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정보이용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정보유통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7년도에는 제주도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 222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이며 결과를 지켜보아 확산여부와 예산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다.

### Ⅳ. 지역정보화의 발전방향

1997년은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 큰 물줄기가 자리잡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야에서 국가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조 분위기가 조성된 중요한 한해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역정보화의 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지방자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지만 이 제도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직접선거를 통한 강력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관할 지역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정보화는 어떤 한 조직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이러한 역할은 큰 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조직이나 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기대된다. 기존의 중앙부처별로 추진된 지역정보화 사업 중 새로운 협조관계가 조성되면 초기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뿐더러 사업에 상승효과가 예견되는 사업들도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서 나서므로써 앞으로 중앙부처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지역정보화와는 달리 한층 다양한 사업전개가 예상된다. 중앙부

처의 통일된 사업방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었던 사업들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 모집을 통하여 실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예산수립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지원없이도 독자적인 사업추진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신한 기획력이 해당지역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패를 가른다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 째로 지금까지 정보화사업은 주로 단말기를 PC로 사용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PC가 정보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PC는 연령적으로는 30대 초반이하, 계층으로는 도시 중산층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PC를 아직도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에 제한 받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보화가 인터넷의 화려한 홈페이지 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정보화 추진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영 남

- 1966년 2월 :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사)
- 1983년 8월 :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EDPS학과 졸업 (경영학석사)
- 1966년 : 육군통신학교 전자공학교관
- 1971년 : 군수보급제도 설계요원(EDPS)
- 1976년 : 전산실 운영과장 제도분석과장
- 1980년 : 육본 전산처 제도발전장교, 기획장교
- 1984년 : 육군행정학교 전산학처장
- 1988년 : 한국정보문화센터 교육훈련부장
- 1995년~현재 :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화본부장